

헌 법

1.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과 대통령이며, 예외적으로 국민이 제안할 수 있다.
- ②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 ③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국회가 의결한 후 즉시 국민투표에 붙여야 한다.
- ④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 ⑤ 헌법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2. 근대헌법에서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대사회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근대 자연법론, 사회계약론, 계몽주의의 사상적 영향 하에서 일어났던 18세기말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시민혁명을 통하여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 ② 1787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헌법은 특유의 증보식 헌법개정방식을 통하여 아직까지도 유효한 헌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제정시에 규정되었던 10개조의 권리장전조항은 그 뒤 여러 차례 추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③ 1789년 프랑스 혁명은 국가내부에서 자행되어 온 절대군주에 의한 전체적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시민혁명으로, 혁명 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채택되고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일련의 혁명헌법이 탄생하였다.
- ④ 독일은 근대 입헌국가의 형성이 지체되어 비교적 헌법상 인권보장이 뒤늦게 정립되었다.
- ⑤ 1871년의 비스마르크 헌법은 독일의 통일에 필요한 실용적 조항만을 수록하고 통일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기본권과 같은 규정은 두지 않았다.

3. 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신체의 자유는 신체의 안정성이 외부로부터의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신체활동을 임의적이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 ②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적법절차원리는 형사절차상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입법, 행정 등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 적용된다.

- ③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압수·수색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④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 뿐만 아니라 그 직계친족, 형제자매, 고용주도 포함된다.
- ⑤ 묵비권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민사·행정상의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4.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로 이해된다.
- ② 일정한 직업에 대하여 영업면허제를 실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 볼 수 있다.
- ③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기의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를 말하며, 직업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유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직업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단계이론에 따라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가능하다.
- ⑤ 공무원에 대한 영업금지헌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5. 다음 중 정신적 자유의 우월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
- ② 애매하기 때문에 무효의 원칙
- ③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 ④ 사전억제금지의 원칙
- ⑤ 합헌성추정의 배제원칙

6. 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다른 것은?

- ① 간통죄의 규정은 남녀평등차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법앞의 평등에 반하지 아니한다.
- ② 교사의 체벌이 징계권행사의 범위 내인지에 대한 수사 없이 폭행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 ③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 것은 법익균형성을 상실한 제도로 볼 수 없다.
- ④ 월남전에 참전한 자가 생전에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등록신청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⑤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이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7.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합치하는 것은?

- ① 헌법상의 재산권이란 사법상 뿐만 아니라 공법상 경제적 가치를 당연히 포함하나,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한 반사적 이익인 개발이익은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역연금수급권은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③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법형식이 사법상의 매매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정한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 ④ 무허가토지거래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다.
- ⑤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이 금지되는 것은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다.

8.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규정은 제3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나 제7차 개정헌법에서 삭제되었다가 제8차 개정헌법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상대설에 따르면 본질적 내용은 개별 기본권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개별적 경우마다 분리시켜 확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개별적인 경우에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평가하고 형량함으로써 비로소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학설은 비례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 ③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만약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그 자체가 무의미하여지는 경우에 그 본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 ④ 헌법재판소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 ⑤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9.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권한대행이 이루어진다.
- ②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된 경우는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 해당하고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는 사고에 해당된다.
- ③ 권한대행의 순위는 제1차적으로 국무총리이고 제2차적으로는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이다.
- ④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가 현상유지에 한하느냐, 현상변경도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 ⑤ 법적으로 대통령의 궐위 내지 사고가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헌법기관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10.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미친다.
- ②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일반적 효력까지 부인하고 있다.
- ③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범위는 실체적인 형벌법규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절차법적인 법률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헌법재판소는 형벌조항을 제외한 그 밖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예외적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11. 헌법소원심판청구요건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다른 것은?

- ① 대리인이 사임후 새로이 청구인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②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③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
- ④ 부진정입법부작위의 경우에는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적극적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을 입법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⑤ 청구인이 언젠가는 기본권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의 우려는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12.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조세평등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 ②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 과세요건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해야 하지만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 ③ 조세 법규의 해석에 있어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확장해석은 허용된다.

16. 다음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의 자문기관 중 유일한 헌법상 필수적 자문기관이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등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관이다.
- ②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상의 임의적 자문기관이며, 1991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 제정되었다.
- ③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의 임의적 자문기관이며 현행헌법에서 신설하였으며, 1999년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을 제정하였다.
- ④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제8차 개정헌법에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로 처음 규정된 대통령의 임의적 자문기관이며, 이에 대한 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 있다.
- ⑤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제8차 개정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어 1988년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제정되었으나 위헌성이 문제되어 폐지되었다.

17.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형사보상청구권은 1849년 프랑크푸르트 헌법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며, 우리나라 헌법의 경우 형사피고인에 대한 보상은 건국헌법부터 규정하였고, 형사피의자에 대한 보상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신설하였다.
- ② 외국인은 형사보상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 ③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미결구금, 형집행으로 구금이 되었을 것을 요하며, 이 때의 구금에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이 포함된다.
- ④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자는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아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형사보상책임은 관계기관의 고의나 과실을 필요로 한다.

18.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근대헌법은 미연방헌법이다.
- ② 면책특권의 대상은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므로 폭력행위는 면책대상이 아니다.
- ③ 지방의회의원도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면책특권이 인정된다.
- ④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 기간은 일시적이지만,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기간은 영구적이다.
- 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결로 제한할 수 있지만, 면책특권은 국회의결로 제한할 수 없다.

19. 헌법소원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 유무에 불구하고 ‘죄가 안됨’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행사라고 할 수 있다.
- ②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다.

- ③ 현행범으로 체포된 청구인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흉기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정밀신체수색은 헌법 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된다.
- ④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령에 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해당된다.
- ⑤ 불공정거래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조치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행하여지는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에 대응되는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권한쟁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도 포함된다.
- ②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에서 권한쟁의의 대상이 되는 법적 분쟁은 헌법상의 분쟁 뿐만 아니라 비헌법상의 공법적인 분쟁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③ 현행 권한쟁의제도는 우리 헌정사상 제3차 개정헌법에 이어 두 번째로 채택하고 있으며, 제3차 개정헌법의 권한쟁의제도는 국가기관간의 권한쟁의심판만을 그 내용으로 했다.
- ④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분쟁이 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국가기관 내부의 분쟁이 아니라 각각 별개의 헌법상의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하여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 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를 청구대상으로 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21.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 헌법은 전문과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함으로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개념인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질서의 최고 기본가치로 파악하고, 이러한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가치를 ‘기본질서’로 선언하고 있다.
- ②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를 말한다.
- ③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체적 내용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국민주권,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직업공무원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을 천명하고 있다.
- ④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위 질서들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는 반면에, 사회국가의 원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 ⑤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기관 및 국민이 준수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

규범이고, 헌법의 각 조항을 비롯한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며,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국가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22. 남북한관계에 관한 아래 설명 중 헌법상 옳은 것은?

- ①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조에 근거를 두는 법률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와는 관계가 없다.
- ②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양측의 정식 국호가 사용되고 양측의 정식 대표자가 서명하였으므로 국가간 조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의문이 없다.
- ③ 헌법상 규정된 통일이라는 국가목표를 저해하지 않는 한 입법자는 남북한관계를 적대적으로 또는 우호적으로 규정하는 유동적인 입법을 할 수 있다.
- ④ 남북기본합의서는 일종의 조약으로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발효되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경료하지 않았으므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⑤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제헌헌법 당시부터 규정되어 왔고 제4조의 통일조항은 현행헌법에서 비로소 규정되었으므로 제4조로 인하여 제3조가 사문화된다는 데 학설은 일치한다.

23. 선거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 ① 미성년자에게는 헌법상 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보통선거원칙은 당연히 민법상의 성년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 ② 투표일에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할지 말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비밀선거원칙의 핵심내용이다.
- ③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한 후보자가 누구인지를 공개함으로써 선거의 비밀유지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임의로 포기할 수 있다.
- ④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하에서 지역구에서 획득한 유효투표의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을 할당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
- ⑤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평등선거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평균 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24.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한 한 지방의회는 국가법령의 위임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조례제정권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③ 조례가 직접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당해 주민은 동 조례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④ 조례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은 주민은 동 조례가 처분적 성격을 갖는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 ⑤ 기초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무에 관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우선하는 조례제정권을 가지며 이 경우 그와 모순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는 효력을 잃는다.

25.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인의 기본권주체성은 생전으로 소급하거나 사후로 추급될 수도 있다.
- ② 법인격의 부여 여부와는 무관하게 사단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법률행위적 성질을 가지는 행동에 대하여 미성년자는 기본권행사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 ④ 공법인의 경우 기본권에 의해 부과되는 의무를 지는 주체이므로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⑤ 외국인에게는 국제적 최소기준의 원칙에 따를 때 출·입국의 자유를 포함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26. 양심을 사유로 한 병역거부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관한 설명이다. 법리상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한 성격의 전쟁을 골라서 참전을 거부하는 것을 선택적 병역거부라 한다.
- ② 양심을 사유로 한 병역거부는 종교적인 성격의 것만이 아니라 평화주의적인 신념에 입각한 비종교적 성격의 양심도 보호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③ 양심을 사유로 한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이를 대체할 복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④ 대체복무는 병역의무보다 훨씬 더 길게, 그리고 복무내용도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
- ⑤ 양심상의 사유를 인정하여 대체복무를 과하기 위하여는 독립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판정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7.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구제방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기본권은 입법에 의해 구체화되기 전에는 그 보장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특징이 있다.
- ② 사회적 기본권은 행정당국에 대하여 직접 급부를 청구할 권리의 근거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최저생계비를 하회하는 생계보호급여에 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 ④ 자유권적 기본권에 부가된 법률유보와 사회적 기본권에 부가된 법률유보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 ⑤ 행복추구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충하는 일반적 권리이지 사회보장적 급부를 청구할 근거로 원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28. 사립대학교 인근에 건설회사가 고층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사립대학교가 헌법 차원에서 강구할 수 있는 구제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설회사로서는 건축업이 그들의 영업활동일 것이므로 영업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현행법상 사립대학교는 재단인 학교법인의 산하 기관으로 보므로 학교법인이 당사자로서 사법적 구제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 ③ 헌법이 환경권으로써 보장하는 환경의 범위를 넓게 보면 자연적 환경 외에 인공적 환경을 포함할 수 있고, 따라서 교육환경도 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대법원도 헌법상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여 사립대학교의 교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건축예정인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한 바 있다.
- ⑤ 사립학교와 건설회사 사이에 기본권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비례성원칙과 수인한도론을 원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29. 예산과 법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현행법상의 해결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법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에 대하여 예산명세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 ② 총액으로 결정된 용도미정의 재원인 예비비를 사용하여 법률의 집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 ③ 예산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말미암아 경비에 부족이 발생한 경우라면 정부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제출할 수 있다.
- ④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예산을 집행하고 본예산안이 확정되면 가예산의 집행을 본예산에 흡수하면 된다.
- ⑤ 예산과 법률의 불일치로 인하여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처분을 발할 수도 있다.

30.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공무원에 대한 사면은 탄핵의 실효성 차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있다.
- ②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단지 자신의 권한으로써 명할 수 있지만,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 ③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면권은 행정권이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과 적정절차에 따라 행사할 것이 요청된다.
- ④ 사면권은 국가형벌권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국한하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벌 또는 징계법규에 의한 징계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 ⑤ 사면권의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최고기관의 행위로서 통치행위에 해당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31.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국회가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제명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③ 대통령에 의해 재의결이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되는데, 이렇게 확정된 법률안은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의장이 즉시 공포한다.
- ④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폐기되며, 차기 국회에 다시 제출되어야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의결이 있는 경우 국무총리 직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32. 저항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프랑스의 1793년 헌법은 압제에 대한 저항을 인권으로 선언하고 있다.
- ② 독일기본법은 저항권을 국민의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으며, 저항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최후수단성을 명시하고 있다.
- ③ 대법원은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연법에 근거하여 그것을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④ 헌법재판소는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⑤ 저항이 성공하여 법치국가적 질서가 재건되면 저항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정당화된다.

33. 대표제와 선거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영국은 전통적으로 소선거구제와 상대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 ② 중·대선거구제와 소수대표제는 선거의 결과인 의석수에서 국민의 지지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
- ③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저지조향을 두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 ④ 우리 헌정사에서 일정 득표율 이상을 획득한 정당에 대하여 득표수와 관계없이 일정 의석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할증제는 채택된 바 없다.

- ⑤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에 중·대선거구제나 소수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보다 사표가 줄어든다.

34. 기본권의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공임신중절의 경우 모(母)의 행복추구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게 된다.
- ② 언론매체를 통한 범죄사실의 구체적 보도가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위태롭게 하는 경우 언론의 자유와 전과자의 인격권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
- ③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입법의 자유영역의 이론은 기본권의 충돌을 예외적인 현상으로 이해한다.
- ④ 애초부터 두 개의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들 사이의 조정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 ⑤ 기본권의 외견적 충돌(유사충돌)의 경우 그 해결은 법익형량이나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35. 통신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국헌법과 현행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같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 ② 우편의 비밀의 보호범위는 발송물의 내용에 국한된다.
- ③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법인이나 권리능력이 없는 단체는 통신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⑤ 허가없이 행해지는 무선통신은 보호받을 수 없다.

36. 우리 헌법규정 중 의원내각제적 요소에 속하는 것은?

- ①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다.
- ②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 ③ 국회해산에 관한 규정이 없다.
- ④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두고 있다.
- ⑤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37. 국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을 제외하고는 양원제를 채택한 바가 없다.
- ②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헌법은 비례대표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③ 국회의원선거권의 행사요건과 국회의원피선거권의 행사요건은 같다.
- ④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시 2000만원을 기탁하도록 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조항을 위헌선언하였다.
- ⑤ 국회의원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실시한다.

38.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더라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는 하여야 한다.
- ②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 ③ 전직대통령에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증언 등의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어긋난다.
- ④ 전직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 복권된 경우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
- ⑤ 전직대통령에 대한 연금지급액은 재직시의 대통령보수연액의 100분의 95 상당액으로 한다.

39.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법을 개정하여 3인의 국회부의장을 둘 수 있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원칙적으로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 ③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합은 최다선 의원이나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가 공고한다.
- ④ 국회부의장이 법률공포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⑤ 보궐선거로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취임한 자의 임기는 2년이다.

40. 대법원의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 ② 대법원장으로 임명되기 위한 법조경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위한 법조 경력은 같다.
- ③ 대법원에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대법관회의를 둔다.
- ④ 대법원장의 궐위·유고시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⑤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임의기관이다.